

6,714억 원 규모 '주소정보산업', 국가승인통계로 첫 공표

- 3월 7일 20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국가통계(110033호)로 첫 공표
- 주소정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산업통계'를 국가통계로 지정·조사해 3월 7일(금)부터 일반에 처음으로 공표·제공한다고 밝혔다.

< 주소정보산업 >

- ▶ (정의)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 (분류) 1.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2.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3.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 예)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설치, 주소 변경 대행, 주소 정제, 실내·외 내비게이션 등

○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산업 자원화'라는 정책 목표를 세우고, 체계적으로 주소정보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21. 6. 9.)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2조 (주소정보산업의 진흥)

○ 또한 통계청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수요가 많은 분야에 한해 승인·공표되는 국가통계로 '주소정보산업통계'가 지정('24. 11. 13.)됐다.

□ 지난해 12월까지 2달간 조사된 '주소정보산업통계'는 국내에서 처음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과 관련된 공식 국가통계로 주소정보가 산업생태계에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체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개요 >

구분	내 용
승인번호	110033호('24. 11. 13.)
기준일	'23. 12. 31.
항목	사업체·종사자 현황 등 38개 항목
조사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487개 사업체 및 기관
기간/방법	'24년 11월 18일 ~ 12월 13일 / 조사표에 의한 면접조사 원칙
기관	행정안전부(주소기반산업협회 위탁 조사)

- 국가통계포털, 행정안전부 누리집, 주소정보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되는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 현황) 통계청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및 주소기반 산업협회 회원사에서 487개사를 주소정보산업 분야 사업체로 확정하고 이 중 390개사가 응답하였다.
 - (사업체 현황)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총 매출액은 약 6,71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 사업체 평균 운영기간은 14.2년이며, 기업인증(벤처, ISO 등)을 받은 사업체는 12.3%,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사업체는 13.6%로 조사됐다.
 - (인력 현황)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1만 591명(상용 1만 578명)으로 주로 온라인 채용사이트(76.7%)를 통해 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주소산업 분야의 숙련된 인력의 부족'(49.7%)이 인력 확보의 주된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나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 (주소 활용) 현재 주소정보 누리집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주소정보 중 가장 필요한 정보는 도로명주소(83.3%)였다.
 -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 중 가장 필요한 정보도 도로명주소(출입구·도형 정보 등 상세정보 포함)(76.2%)로 조사됐다.
 - 또한, 새롭게 추가 제공을 희망하는 데이터는 데이터지능정보(71.8%)가 1순위로 꼽혔다.
- ※ 데이터지능정보 : 주소정보와 공공데이터 등을 융·복합하여 주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검색, 챗봇, 추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보
- (정책 수요) 주소정보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들은 정부에 연구개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사업 확대, 다양한 주소정보의 추가 제공 등 산업 육성·진흥 정책이 추진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통계를 기초로 연내 우수기업과 우수서비스를 발굴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진출 가능 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정부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주소정보산업이 지금은 소규모이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로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해 산업 육성 방향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책임자	과 장	박희건 (044-205-3551)
		담당자	주무관	신성심 (044-205-3554)



참고 1

주소정보산업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도로명판 제조·설치·관리업 그 외 주소정보시설물 제조·설치·관리업 (도로명판 제외)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 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수집·처리업	주소정보 수집업 주소정보 처리업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주소정보 제공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참고 2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내용

구분	조사 내용	
사업체 일반현황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성별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사업체 규모 기업인증 주소 관련 주요 활동 및 생산품
종사자 현황	종사자 지위별 전체 종사자 수 종사자 지위별 주소정보산업 관련 종사자 수 직무별 주소정보산업 관련 종사자 수 지난 한해 신규 채용 여부	지난 한해 신규 채용 현황 인력 채용 경로 전반적인 인력수급 상황 인력확보가 어려운 원인
사업체 운영 현황	2023년 결산 기준 총 매출액 현황 주소정보산업 관련 매출액 비중 공개하는 주소정보 중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주소정보 중 필요한 정보 주소지능정보 중 필요한 정보	주소정보 데이터 획득 경로별 비중 주소정보산업 관련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현황 지난 한해 주소정보 관련 연구개발 수행 여부 지난 한해 주소정보 관련 연구개발비 주소정보산업 관련 보유 지적재산권
정책 수요 파악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 항목 주소정보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자금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연구개발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판로·마케팅 지원 중 가장 필요한 지원 주소정보 관련 제도 개선 중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 주소정보산업 관련 건의사항

참고 3

'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결과 (요약)

□ 모집단

- (구성·응답)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명부 및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사에서 487개사를 주소정보산업 분야 사업체로 확정, 실제 390개사 응답

(단위: 개사)

계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 행정, 협회 및 단체
	주소정보 시설물 제조· 설치·관리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주소정보 수집·처리업	주소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업	기타 주소정보 관련 서비스업	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
390	201	23	78	80	5	3

□ 업체 규모

- (사업체 현황 및 분포)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30.3%가 '인천·경기', '서울'(16.7%), '광주·전라권'(13.8%) 순 분포

(단위: %)

인천·경기	서울	부산·울산· 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세종	광주·전라	강원·제주
30.3	16.7	12.6	7.2	13.3	13.8	6.2

- (운영기간) 평균 운영 기간은 약 14.2년으로, 15년 이상도 44.9%

(단위: %)

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평균 운영기간
5.1	8.2	9.7	14.6	17.4	44.9	14.2년

□ 인력현황

- (종사인력) '상용근로자'가 98.88%로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

(단위: 명)

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10,591	10,578	13

- (인력수급 곤란 사유) '해당분야 전문·숙련 인력 부족' 49.7%로 최다 사유

(단위: %)

해당 분야 전문/숙련 인력 부족	요구하는 급여 수준의 불일치	열악한 근무 환경 (복리후생 등)	소규모 사업체 기피	사업장 소재지
49.7	30.3	12.9	5.8	1.3

※ (인력수급 방식) 온라인 채용 76.7%, 내부 추천 29.3%, 자사 누리집 공고 7.8% 순

□ 정책수요

- (연구개발 지원 필요사항) '교육 등 인력 개발 지원' 56.7%

(단위: %)

인력개발 지원	정부의 연구용역 확대	기술이전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56.7	20.9	13.4	9.0

- (판로 및 마케팅 필요사항) '주소정보시설 설치·제작 등 지방자치 단체의 주소산업 관련 사업 발주'가 가장 필요하다 응답

(단위: %)

지방자치단체 주소산업 관련 사업 발주	판로개척 활동 지원	중앙정부의 주소산업 관련 사업 발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지원
71.2	19.2	7.9	1.7

- (신규 제품 수요) 데이터 지능정보 71.8% 최다(중복 응답 가능)

(단위: %)

데이터 지능정보	이동 지능정보	사용자 지능정보	장소 지능정보	비식별 지능정보
71.8	41.3	36.9	36.7	12.3